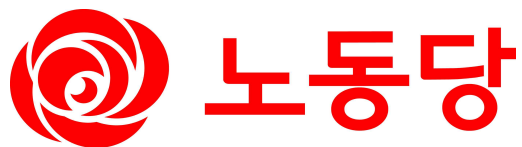


2014년 6·4 지방선거  
노동당 핵심 공약

돈보다 사람을,  
이윤보다 생명을





## 돈보다 사람, 이윤보다 생명

### □ 돈이 먼저인 사회는 침몰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낡은 배를 무분별하게 개조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기준보다 3~4배가 넘는 화물을 싣고도 버젓이 수년, 수십 년을 위태롭게 배를 띄웠습니다. 돈 몇 푼에 민관이 유착했고, 불법 운행 적발과 안전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는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 하는 2014년 한국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 □ 존재 이유를 망각한 정부

하지만, 세월호가 침몰한 자리에 정부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의 탐욕에 대한 통제를 포기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의 생명이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을 동안 무능과 무책임만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정부는 스스로 탈출한 국민들 외에 단 한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 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 정부는 비탄에 빠진 유가족과 공감하기보다는 고위층 의전에 바빴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 정부는 분노한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여론을 통제·조작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제압하려 했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자본의 탐욕 앞에,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정부는 필요 없습니다.

## □ 국가의 존재 이유는 주권자의 안녕과 공공성 회복입니다.

세월호와 함께 동반 침몰하고 있는 한국 사회,  
돈보다 생명을 먼저 지킬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노동당은 언제나 주권자의 안녕과 공공성을 지키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역사회부터  
주권자의 안녕과 공공성을 지키는 정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립니다.

- 1)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하고 필수 규제 강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 에너지 절약·효율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전력 수급 확대를 통해 지역부터 탈핵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3) 생활임금제 도입, 공기업 CEO 임금상한제 도입, 수수료 0% 지역 체크카드 도입 등으로 통해 지역사회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 4)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병 완전 보장 등 박근혜 정부가 약속 파기한 보편복지를 지방정부부터 책임지고 확대하겠습니다.
- 5) 청소노동자 휴게실 제공 등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는 노동환경 조성, 야간노동 제한 등 노동시간 단축, 1주민 1문화 마을 조성 등을 통해 일과 삶이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6) 지자체 고위공직자·산하 공공기관 대표자 인사청문회 도입, 지역 공기업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참여예산제 강화 등 지역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를 혁신하겠습니다.

##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지역사회

### 1. 모든 민영화 STOP / 3대 분야 안전 규제 강화 - (1)

- 1)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규제 강화
- 2)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공영화 전환: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 3) 민간자본 SOC 사업 전면 재검토
- 4) 필요불급한 민간위탁 심의 강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 5) 민간위탁 시 생활임금 준수 계약 체결
- 6) 직·간접 고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2. 방사능 없는 지역사회 / 핵 없는 한국사회 - (7)

- 1) 에너지 절약, 효율화 목표치 도입 및 지원 제도 도입
- 2)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전력 수급 확대
- 3)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 4) 탈핵 실현을 위한 국제적 지역 연대·협력 강화

### 3. 사회양극화 해소 이윤보다 사람 - (11)

- 1) 생활임금-공기업CEO 임금상한제 연동 도입
- 2)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도입 및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 3) 공기업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이원적 이사회 제도 도입
- 4) 수수료 0% 지역 체크카드 도입
- 5) 중소상공인 생활터전 보호: 재래시장 공공 개발, 대형마트 규제, 서민금융 강화

#### **4. 지역부터 보편복지, 빈틈없는 골목복지 - (15)**

- 1) 독립적 지역 복지 수당 도입
- 2) 대중교통도 사는 집도 모두 복지다
- 3) 복지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4) 지역부터 보편복지 빈틈없는 골목복지

#### **5. 일과 쉼, 문화가 어울린 지역사회 - (21)**

- 1)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는 노동환경 조성
- 2) 노동시간 단축 / 일자리 나누기 / 삶의 질 제고
- 3) 도시농업 지원 확대: 무상 텃밭, 시민농원 등
- 4) 1주민 1문화, 문화 마을 만들기

#### **6. 참여와 견제, 지역사회 혁신 - (25)**

- 1) 지자체 고위공직자 및 산하 공공기관 대표자 인사청문회 도입
- 2) 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 확대
- 3) 공기업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이원적 이사회 제도 도입

# 모든 민영화 STOP

## 3대 안전 분야 규제 강화

### ○ 현황 및 취지

- 19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정권마다 모두 규제 완화, 민영화를 추진함. 이로 인해 정부의 역할과 시장에 대한 통제가 과도하게 축소되어 최소한의 공공성과 국민 안녕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름
- 박근혜 정부 역시 집권 1년차부터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고, 이후 의료와 교육 부문까지 민영화 확대 추진
- 민영화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호시탐탐 자행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가 청소 및 재활용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미 상수도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도 13%에 달함
- 지자체의 민영화는 청소나 수도 사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공공 의료원, 각종 공공복지서비스 등 모든 공공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
- 공공업무의 무분별한 민영화는 해당 부문 종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수익 중심 운영으로 인한 공공재 비용 상승 및 질 악화 등의 문제를 야기함
- 또한 용인 경전철, 지하철 9호선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민간위탁 자본의 수익 보장을 위한 세금 낭비로 지자체 재정 운영에 막대한 악영향을 야기함

### ○ 핵심 공약

#### 1)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규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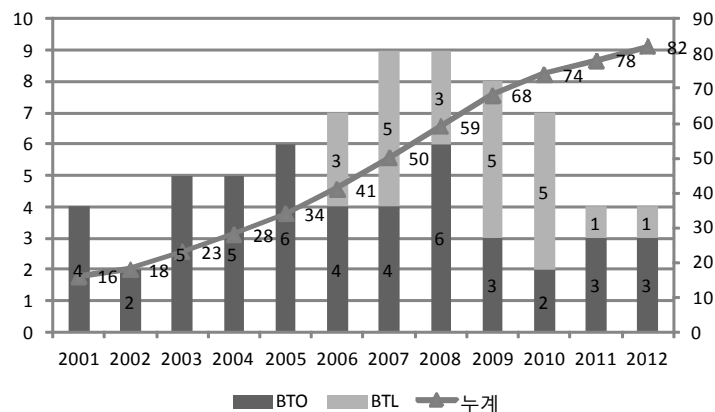
- ◆ 산업안전/ 생활안전/ 환경안전 3대 분야 '사전영향평가제' 도입으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 ◆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비정규직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안전 관리 책임을 높이겠습니다.

- 세월호 참사는 과도한 규제 완화와 무능한 재난 대비 시스템, 주요 안전 관리 업무에서 나타난 비리 등 총체적 부실의 결과임
- 비단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하루 평균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OECD 최고의 산재사망율,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생계 비관형 자살, 각종 화학물질 및 방사능 유출, 미세먼지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가져온 우리 사회의 위험은 곳곳에서 증가
-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생활안전/환경안전 3대 분야에 대해 ‘사전영향평가제’ 등을 도입해 안전 규제를 더욱 강화
- 또한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정부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분야 민간위탁·비정규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 2) 민간자본 SOC 사업 전면 재검토

- ◆ 과도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민간자본투자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 ◆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민간자본투자 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을 적극 검토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겠습니다.

- 2000대 이후 민간자본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2012년 현재 누적 액수는 82조 원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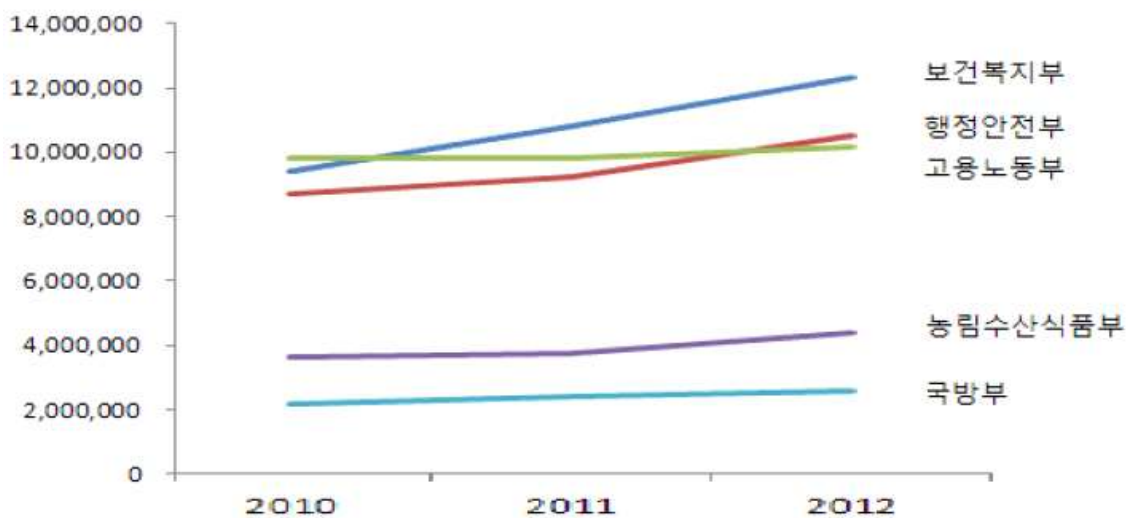
- 민간자본투자 확대에 의한 정부지급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 BTL사업의 경우, 2008년 109억이던 지급금이 2012년 4,848억으로 4년 만에 44배나 급증하였고, BTO의 경우(지자체 사업 제외) 2002년 591억의 운영수입보장금이 2012년 6,087억원으로 10년 새 10배 급증



### 3)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공영화 전환: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 ◆ 광역단위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여, 사회서비스 직영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 사회서비스 종사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정부에서 실시하는 민간위탁 사업은 지난 2008년 39조 규모에서 2012년 52조 까지 13조원이 늘어날 정도로 급격하게 확대,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증가가 눈에 띈.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현황과 정책과제, 2012. 8.

-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 중 특히 활동보조서비스와 요양보호사는 수혜자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정부의 인증제 도입 후 사실상 민간위탁으로 방치, 서비스 공급자(돌봄 노동자)와 수요자 모두 불만족인 상황이 지속
-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를 통합·운영하는 지방정부 직속의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지역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 이 경우 민간위탁에서 발생하는 업체 이윤분을 해당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어 평균적으로 7%~10%에 달하는 임금인상이 가능하여 사회서비스 종사 노동자 처우 개선에도 도움

### 4) 민간위탁 심의 강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막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 **민간위탁 심사 기준에 고용안정 지수를 포함하여 고용안정이 높이고 부당노동행위를 줄이겠습니다.**

-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민간위탁 사업은 약 2,800여 건. 이 중 광역자치단체가 360건, 기초자치단체가 약 2,440건의 민간위탁 실시.
- 민간위탁에 사용되는 예산은 연간 약 6조원. 광역단체의 민간위탁 비용은 약 1조 4천억에 달하며,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 비용은 약 5조 6천억임
- 민간위탁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야기하고, 또한 최저낙찰제 관행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을 확대시킴
- 이로 인해 민간위탁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와 보건업, 시설관리 분야의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음
- 이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민간위탁 시 고용안정 지수를 심사기준에 포함하여 해당 부문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함

## 5) 민간위탁 시 생활임금 준수 계약 체결

- ◆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여, 지방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조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 **특히, 민간위탁 시 생활임금 준수 표준계약을 마련하여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생활임금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임금의 최소수준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하지만, 기존 생활임금조례는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배제됨
- 최저낙찰제 관행으로 인해 민간위탁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고정되어 있어 가장 피해가 심함
- 이에 민간위탁 시 생활임금 준수 표준계약을 마련하여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 6) 직·간접 고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의 직접·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명시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예방하겠습니다.

- 정부는 반복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대상 규모를 매우 한정하여 비정규직 감소 효과는 실질적으로 매우 미약함
- 또한 신규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비정규직 사용 규모는 줄지 않고 있음
- 이에 정규직 전환 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비정규직 사용에 제한을 두어 공공기관 비정규직 규모를 실질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및 집행토록 함



# 방사능 없는 지역사회 핵 없는 한국사회

## 0 현황 및 취지

- 석유와 핵에너지 에너지 의존 심화: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의 석유 에너지와 핵에너지 의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전체 중 96.4%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력 자급률은 2.95%(2011년)에 불과함.
- 피크오일, 핵 위험에 대한 취약성 증대: 낮은 식량자급률과 비화석에너지 운송수단과 냉난방 수단의 저조한 보급은 다가오는 피크오일에 대한 도시의 대응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듦.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핵발전 증설 정책이 지속되면서 과도 밀집한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성도 시시각각 높아지고 있음. 또한 노원구 방사능 아스팔트 사건, 수입 수산물의 방사성 핵종 검출 사례들은 대도시도 방사능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줌.
- 에너지의 지역 불평등 갈등 격화: 밀양과 청도 등의 고압송전탑 건설 문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지리적 차이로 인한 수송비용 증대와 사회적 갈등 격화는 대도시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지역적 계급적 에너지 불평등 문제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임을 알려줌.
- 재생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수요 저감 잠재력 사장: 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소비 효율화 촉진 정책의 미비로 대도시의 큰 에너지 잠재력이 여전히 잠자고 있음. 존 번 교수(텔라웨어대)의 연구에 의하면, 5월 한 달간 학교, 도서관, 공공기관 등 서울시 전체 건물의 32%의 지붕 태양광을 활용하면 서울 전체에 한 달 동안 필요한 전력공급이 가능하며, 에너지 효율화는 원전, 화력 등 전통적 발전 방식의 고용에 비해 4배 정도 고용창출효과 있음.
- 지역 수준의 에너지 정치가 진행 중: 현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비롯하여, 4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탈핵·에너지전환 선언, 여러 지자체 수준에서의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와 탈핵 정치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바꾸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역 에너지 정책과 대중운동이 필요한 때임.
- “2030 탈핵 한국”의 구체화: 당은 노후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에너지 수요와 공급 전환을 통한 2030년 탈핵 시나리오를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음. 지자체 수준의 에너지 정책은 이를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계기와 수단이 되어야 함.

## ○ 세부 추진방안

### 1) 에너지 절약, 효율화 목표치 도입 및 지원 제도 도입

- 광역시도별 에너지 자립률 목표 법제화: 광역시도별로 에너지(전력 수요, 화석에너지 소비량) 자립률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연차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5년 단위로 점진. OO광역시/도 에너지 기본조례를 재개정하고 시행령을 추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내용을 포함.
- 대도시 에너지 효율화 종합 프로그램: 신개축 건축물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중소 노후 건물 에너지 개량 사업, 대형건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강화, 혼잡통행료 확대 등으로 대도시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 광역시도 에너지 효율화 기구 운영: 광역시도 산하 에너지 컨설턴트 공사 설립과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사회적 파트너십 구성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주체와 시민들의 네트워크 지원.

### 2)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전력 수급 확대

- 광역시도별 재생에너지 설비 대폭 확충: 광역시도 차원의 기금을 활용하여 지자체 수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으로 자생적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유도. 신축 및 증개축 공공건물에 재생에너지 의무 상향(30%로)하고 기존 공공건물도 재생에너지 목표 도입, 민간건물 지붕 임대 태양광 설치 사업 지원 확대.
- 광역시도 에너지공사 설립: 종합적인 에너지 믹스와 효율을 고려하여 에너지 설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에너지공사를 설립 운영, 집단에너지, 태양광, 지열, 자원회수 시설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과 에너지 이용 시설을 연계.

### 3)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 방사능안전 급식조례 제정: 학교급식 방사능 피폭 위험이 없는 식재료를 아이들의 급식에 보장하고, 학교급식이 우리 주변 식품 방사능의 ‘최후의 방어막’이 되도록 조례 제정. 특히 정례적인 식재료 방사능 검사와 구속력 있는 심의 의결권을 갖는 감시기구 구성 및 정보 공개와 검출시 사용 제한, 관련 예산 확보를 명시.
- 저선량 방사능 안전 대책: 강우와 대기, 토양 중의 인공 및 자연 저선량 방사능 측정과 정보공개 및 안전 컨설팅. 시민 차원의 자율적 방사능 계측과 대응 활동 지원.

#### **4) 탈핵 실현을 위한 국제적 지역 연대·협력 강화**

- 해외 탈핵 도시 및 에너지 자립마을과의 연대: 해외 도시들과의 탈핵 에너지 교류와 협력 사업으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개발.
- 남북 비핵 평화 에너지 협력: 개성 공단 등을 활용한 남북 재생에너지 생산과 북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지자체 수준의 지원 정책





# 사회양극화 해소 이윤보다 사람

## ○ 현황 및 취지

- 사회양극화·소득불평등 심화: 2011년 임금불평등(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 4.78배, OECD 27개 회원국 중 멕시코, 미국 다음으로 심각
- 임금불평등·저임금 해소 정책 수단인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38%로 실질적 정책 효과가 매우 미비
- 비정규직 확대에 의한 고용불안 심화: 비정규직법 제정 이후에도 비정규직 고용 불안 상황 개선 미비
- 위탁/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은 전무한 상황

## ○ 세부 추진방안

### 1) 생활임금·공기업CEO 임금상한제 연동 도입

- ◆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에 직·간접으로 고용된 노동자(위탁 포함)에게 지역 수준에 맞는 생활임금 지급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 지자체가 정한 생활임금의 10배가 넘지 않도록 지자체 공기업 CEO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소득 양극화를 축소하겠습니다.
- 생활임금조례 제정: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에 직·간접으로 고용된 노동자(위탁 포함)에게 지역 생활 수준을 고려한 생활임금 이상 임금 지급 의무화. 지역 노사정 협의를 통해 직군별 생활임금을 정하되, 최소 최저임금의 120% 이상이 되도록 정함
- 생활임금제·공기업CEO임금상한제 연동: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에 직·간접으로 고용된 모든 사람들의 최대 임금이 지역 생활임금의 10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되도록 지역 공기업 임금상한 조례 도입

※ 임금상한제 해외 사례

- 스위스 기업내 최저 임금의 12배가 넘지 않는 헌법개정안 발의, 부결
- EU: 금융권 보너스 상한제 도입, 연봉을 초과하는 보너스 지급 제한
- 독일: 「임원보수의 적정화를 위한 법률」, 임원보수 산정의 원칙과 정신 천명
- 프랑스: 장뤼크 멜랑송 대선 공약, 연간 최고소득을 36만유로(약 5억3000만원)로 제한. 36만유로는 프랑스 중간 소득의 20배
- 미국: 구제금융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임원보수규제 조항. 「긴급경제안정법」은 구제금융 지원 대상 기업의 특정 임원보수에 대해 소득세 공제한도액을 50만 달러로 하향조정,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에 관한 법률」은 구제금융 지원대상 기업의 임원에 대한 성과형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제한.

## 2)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도입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 지자체 및 공기업 위탁 사업 입찰 심사 기준에 고용안정 지수를 포함시켜 고용안정이 높고 부당노동행위가 없는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른바 ‘착한기업우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막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조례 제정: 지자체가 시행하는 위탁사업 입찰 심사 기준에 지역 노사정이 개발한 고용지수를 포함
-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과 특정 규모(예를 들면 100인 이상)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산업별·규모별로 지역 노사정이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차별적 고용관행 시정 및 제도 개선 조치를 요구, 이의 시행 여부에 따라 지자체 및 공기업 발주사업 입찰에 가점 또는 감점 부여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행정사무 위탁 사업에 대해 위탁 타당성 검토를 통해 위탁 남용 제한, 위탁 시 고용조건 기준 제시 및 준수 감독, 지역 노사정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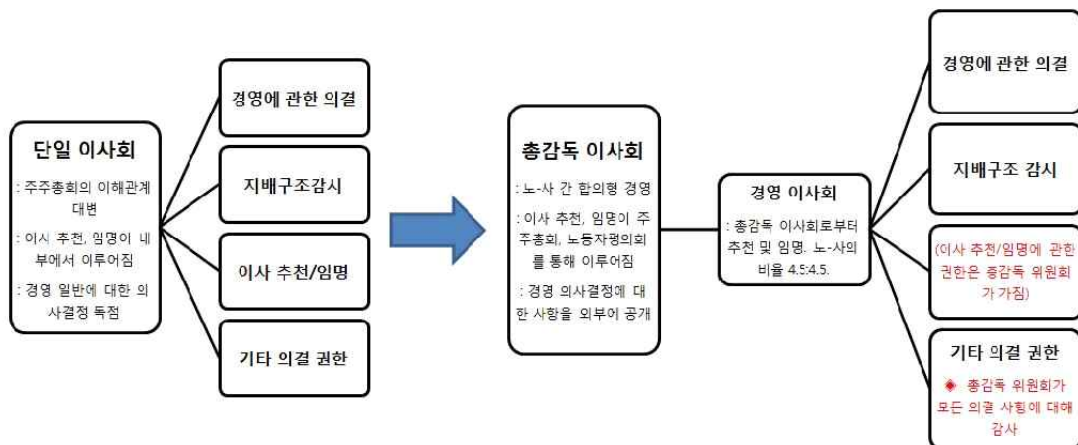
## 3) 공기업 노사공동 결정제: 이원적 이사회 도입

◆ 지자체 산하 공기업에 이원적 이사회를 도입하여, 공기업 민주화와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 기존의 경영시스템에서는 단일 이사회가 경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의결하고, 이

에 대한 감시권 역시 독점.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감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이나 문제제기가 원천 봉쇄되어 있음.

- 공기업 이사회를 최상위 기구인 ‘총감독 이사회’와 ‘실무(경영) 이사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여, 내부 폐쇄형 경영구조를 외부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의사결정의 민주화와 효율적 경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
- 이원적 이사회 제도 도입을 통해, 경영의 전문성을 보장하되 동시에 감시권-의결권을 분리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담보토록 함



<이원적 이사회 예시>

#### 4) 수수료 0% 지역 체크카드 도입

◆ 광역단위 공영 체크카드 공사를 설립하여 수수료 없는 체크카드를 도입하겠습니다.

- 2011년 자영업(소상공인) 업체수는 283만 개로 전체 사업체 수 대비 87.6%에 달하며, 종사자 수는 554만명에 달함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82.6%가 생계유지를 위해 창업했으나 월 평균 순이익은 2013년 현재 187만원으로 노동자 평균 정액임금 234만원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
- 반면 2013년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가 2.14%, 직불카드가 1.41%으로 월 평균 15만원 이상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셈
- 이에 광역단위 공영 체크카드 공사를 설립하거나 신규 공사 설립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이 경우 지자체 금고 운영 은행과 MOU를 체결해 지자체 금고 운영 이익 지역 환수의 한 수단으로 수수료 없는 체크카드를 도입

**5) 중소기업인 생활터전 보호: 재래시장 공공 개발, 대형마트 규제, 서민금융 강화**

- ◆ 재래시장 공공 개발과 대형마트 입점 심사 강화를 통해 자영업자 생활 터전을 보호하겠습니다.
- ◆ 상가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을 제공하여 권리금 계약을 양성화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부당 회수를 방지하겠습니다.
- ◆ 기초단체마다 중소기업인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해 '갑'의 횡포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지역부터 보편복지 빈틈없는 골목복지

## ○ 현황 및 취지

- 한국의 GDP 대비 복지 예산 수준은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29개국 29위로 최하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측정한 복지종합지수 국제비교의 의하면 한국은 34개국 중 20위로 중하위권이나, 복지충족이나 복지환경 부문은 각각 31위, 33위로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은 여전히 매우 미약한 수준임
- 그럼에도 지난 총선과 대선 시기 정부 여당이 제시한 복지 공약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거나 축소 후퇴하고 있는 상황
- 하지만 복지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로
- 노동당은 지금까지 복지의 영역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교통, 주거, 에너지 등의 영역까지 복지 정책을 확대시키고, 미진한 기존 복지 수준을 확대하여 보편 복지 구현을 목표로 함

## ○ 세부 추진방안

### 1) 독립적 지역 복지 수당 도입

- ◆ (박근혜 정부가 안 지킨 기초노령연금 대신)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중앙정부 연금에 더해 지역 노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 ◆ (박근혜 정부가 안 지킨 4대 중증질병 100% 보장 대신) 모든 의료비 자기 부담이 연간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지역 주민 의료보장비를 지급하겠습니다.
- ◆ (박근혜 정부가 안 지킨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100% 지원 대신)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은 나머지 50%, 지방정부가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 재정여건, 인구 구성,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지역에 알맞은 지역 수당 조합 선택

- 폐지 줍는 노인이 없는 사회, 돈과 상관없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 받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 국가임
- 박근혜 정부가 후퇴시킨 기초노령연금을 대신하여 지역의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과 상관없이 지역 노인 기본소득 지급 (재정 추계는 아래 표 참조)
- 박근혜 정부가 후퇴시킨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대신하여 지역 주민 의료상 한계를 도입, 연간 자기 부담 의료비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의료보장비 지원
- 박근혜 정부가 후퇴시킨 비정규직 사회보험료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50%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지원

<참고 - 지역 기초노령연금 재원 예시>

지역	대상자	소요예산(단위:억원)		지역	대상자	소요예산(단위:백만원)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서울	1105583	3980	6633	경기	1135242	4086	6811
부산	442199	1591	2653	강원	241694	870	1450
대구	274152	986	1644	충북	215245	774	1291
인천	267059	961	1602	충남	309840	1115	1859
광주	144732	521	868	전북	303586	1092	1821
대전	142979	514	857	전남	366524	1319	2199
울산	85736	308	514	경북	437519	1575	2625
세종	17214	61	103	경남	414831	1493	2489
				제주	75925	273	455
※ 시나리오 1: 월 3만원 지급 / 시나리오 2: 월 5만원 지급							

## 2) 대중교통도, 사는 집도 모두 복지다

- ◆ 마을버스부터 공영화, 무상 공공 교통 시대를 열겠습니다.
- ◆ 경매주택 사전매입제도 등 기존주택 매입방식 확대를 통해 공공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 ◆ 부실한 뉴타운 지구에 대해 직권해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고 소규모 재정비 사업 위주로 전환하는 뉴타운 출구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을버스부터 무상교통>

- 우리나라 가구지출 중 교통비는 12.3%로 식료품 구입과 음식/숙박 지출 다음으로 높음

-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의 10% 이상을 교통통신비에 사용
- 전국적으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버스준공영제를 통해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정책이 시행 중이나,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부담이 매년 증가함

전국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현황

자료: 각 시

지역	버스회사	버스 수	시행 시기	적자보전액 (2010)	쟁점
서울	66곳	7548대	2004년 7월	3000억원	버스회사 임원 고액 연봉
부산	33곳	2532대	2007년 5월	1012억원	시민단체 요금인상 철회 요구 농성·서명, 감사원 감사 청구 및 법원 소송 예정
대구	26곳	1658대	2006년 2월	890억원	적자 보전금 해마다 100억원씩 증가
대전	13곳	965대	2005년 7월	410억원	내년 6월 요금 15.8% 인상 계획
광주	10곳	952대	2006년 12월	354억원	시민 470명 '버스회사 방만 경영' 감사 청구

- 또한 완전 공영제가 되지 않은 준공영제의 경우 대중교통회사의 운영수입과 지출 원가의 차액을 보전하면서 추가적으로 업체의 이윤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 가중
- 마을버스부터 공영제 시동: 지역간 마을버스 노선 총연장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부터 지역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공공노선제를 운행. 노선신설 및 증차에 따른 재정지원이 발생하나, 현행 마을버스 보조금 사업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소요되는 것은 아님.

#### <경매주택 사전매입제 도입으로 공공주택 확대>

- 주택보급율이 전국적으로 102%(2012년 기준)로 100%가 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 서민의 주택난은 가중되고 있음.
- 하지만, 기존의 신규 공급방식의 공공주택 정책은, 사실상 뉴타운 재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편승하는 방식이거나 혹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전제로 한 사업 모델로, 공공주택 마련의 부담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뉴타운재개발과 같은 나쁜 재정비사업을 유지시키는 제도 내 유인으로 작용해왔음.
- 노동당은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경매주택 사전매입제도 등 기존주택 매입방식 확대를 제안: 지방정부가 법원 경매로 넘어가기 전의 단계에서 다가구 소유자의 경매대상 물건의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분할하거나 혹은 이전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매전 사전매입' 제도를 도입.

\* 수도권 경매건수 : ('08)21,507건→('09)32,272→('10)35,552→('11)40,944→('12)51,546  
[출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국토부, 2013. 4.)

- 지방정부 산하 도시공사에 경매를 전담하는 공공경매사를 채용하고 경매물건(예정)에 대한 사전 매수를 전담토로고 함. 우선적으로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매입하고, 이후 활용을 고려하여 부분매입보다는 토지매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 <소규모 재정비 사업 위주의 뉴타운 출구 전략>

- 실패한 뉴타운: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신규주택 매수를 통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조합의 비민주적 운영,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각종 재개발비리가 만연한 실정임. 최근 재개발지역의 정비/철거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다원그룹의 회장이 5천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조합-시공사의 재개발 부패카르텔이 형성되었음.
- 불투명한 뉴타운 출구 전략: 실패한 뉴타운 정책에 대해 지역별로 지구 지정 해지 등 출구 전략을 모색. 경기도는 당초 213개 구역에 달했던 뉴타운 사업 구역이 104곳으로 줄었으며, 서울시는 당초 606개 구역 중에서 148곳이 구역해제나 추진위 등의 해산 결정. 하지만, 여전히 지역에 따라 과도한 해제동의율(ex. 서울 50%) 요구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음. 사업 집행도, 취소도 되지 않는 상황은 결국 주민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방치하는 꼴.
- 기존 뉴타운 정책이 가지고 있는 생활권을 고려한 면단위 도시계획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사업부담이 적은 소규모 재정비 사업으로 전환.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소유한 국공유지 면적만큼 공공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재개발사업의 공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
- 또한 현행 「도정법」상의 주거환경관리사업(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낙후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를 공공자금을 통해서 직접 시행하도록 해서 재생사업의 부담을 완화. 필요 재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적극적으로 활용

### 3) 복지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 활동보조사업과 요양보호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지방정부 직속의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습니다.

- 활동보조서비스와 요양보호서비스는 관내에 수요 대상자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회서비스의 수급관리가 필요한 분야
- 하지만 지금처럼 사회서비스 공급을 민간 시장에만 맡길 경우, 사회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지고, 사회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부작용 발생
- 이에 따라, 각 지역의 활동보조사업과 요양보호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지방정



부 직속의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활동보조인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직무교육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함.

- 이 경우 민간위탁에서 발생하는 업체 이윤분을 해당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어 평균적으로 7%~10%에 달하는 임금인상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 별도의 교육비가 지출되는 직무교육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시책사업이 가능해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4) 지역부터 보편복지 빈틈없는 골목복지

- ◆ 기초단체마다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해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동네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 공보육 비율을 높여 가겠습니다.
- ◆ 광역단체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겠습니다.

#####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 2012년 출생아수는 48만5천명으로 합계출산율은 1.297명
- 반면, 산후조리원은 '12년 현재 510개소, 연간 15만명(전체 산모의 32%)이 이용하는 수준. 매년 5%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 중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정작 출산에 필요한 산후조리원은 절대적 수가 부족하고 비용이 매우 높은 수준.
- 뿐만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시설의 경우 감염예방·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시·군·구마다 보건소 산하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경우 공공 산후조리사를 파견하는 서비스 제공
- 1개소 당 연간 운영비 약 15억~20억 소요

##### <내집앞 국공립 어린이집>

- 2000년 이후 보육정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커지고 있으나,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시설 대비 고작 5.3%(2011년 기준)에 불과해 보육 공공성은 여전히 매우 취약한 상태
- 해외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대체로 절반 이상으로 스웨덴 42~91%(연령별), 일본 53%, 독일 40%, 호주 34% 등 우리에게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민간 보육시설은 질 관리의 문제, 특별활동 등 추가 비용의 문제(사실상 보육료

- 인상)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며, 막대한 재정 지원이 단순히 민간 보육시설 운용자의 수익을 올려주는 정책 실패 발생
-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누구나 동네에서 인근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3개씩 설치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 지역 내 여유 공공시설(초등학교 여유시설, 주민센터 리모델링 시 발생 공간, 주민문화센터 내 여유공간 등) 또는 공공부지(지역공원 등) 활용 및 기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추진 등의 방식으로 건립비 절감
  - 1개소 당 평균 운영비는 3세 이상 77인 이상 시설의 평균보육비용 적용 시 약 3억 5천만원 수준

#### <장애인자립생활지원 및 교통약자 교통증진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한 경우가 82.88%에 달하고,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62.14%에 달함
- 즉, 자립생활에 대한 요구가 강하지만, 여전히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강제 수용’되고 있는 상황임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주거 정책, 소득보장 정책, 이동권 정책, 탈시설 정책, 활동보조 지원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함
- 장애인자립생활 종합 지원 계획 수립은 이러한 정책을 모두 포괄해 실질적 자립생활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임
-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지역에는 저상버스가 부족한 상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 계획의 전면 재검토 및 조기 도입 실시

# 일과 쉼, 문화가 어울리는 지역사회

## ○ 현황 및 취지

- **장시간 노동:**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92시간(2011년 기준)으로 OECD가입국 중 2번째로 길며, 평균 1765시간에 비해 327시간을 더 일 함. 이를 1일 8시간 노동을 전제로 환산하면 평균 8주를 더 일하는 셈
- **쉬지 못 하는 주말:** 주5일제 시행 시 주말과 연차, 공휴일을 포함하여 쉴 수 있는 날은 모두 120여일이나, 비정규직이나 서비스직 노동자들은 공휴일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산업 특성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간 휴일 수는 70일에서 130일까지 큰 차이를 보임.
- **여유 없는 삶:** 한국 직장인의 77.8%가 평일 여가시간이 3시간 이하. 이 중 43.2%는 2시간도 못 쉰다고 응답.
- **잠 못 자는 시민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반으로 프랑스에 비해 매일 1시간씩 덜 자며, OECD 국가 중 가장 수면시간이 짧은 나라 중 하나.
- **긴 노동시간, 휴식 없는 삶은 문화향유권의 축소와 능률 저하 및 산업재해 발생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조성은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우선적 과제 중 하나**

## ○ 세부 추진방안

### 1)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는 노동환경 조성

- ◆ 환경 미화 노동자에게 샤워시설을!
- ◆ 판매 노동자에게 의자를!
- ◆ 건물 청소 노동자에게 휴게 공간을!
- ◆ 식당 여성 노동자에게 쉼터를!
- ◆ 사회서비스 노동자에게 거점 공간을!

- 환경 미화 노동자에게 샤워시설을: 환경 미화 노동자가 일하는 대다수 작업장에

는 샤워 시설이 취약. 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의 몸에서 26만 개의 박테리아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버스 손잡이(380개), PC방 마우스(690개), 쇼핑카트(1100개), 터미널 화장실 변기(3800개)에서 검출되는 박테리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임. 지자체별로 환경 미화 노동자의 작업장 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작업장에 샤워시설 등 노동보건 편의시설을 설치.

- **판매 노동자에게 의자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판매노동자들은 업무시간의 90% 이상 서서 일함. 하루 8시간을 서서, 3~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정맥류 발생위험이 8~12배 높아짐. 앉아서도 시민과 고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앉을 권리와 건강을 위해 고객 및 관리자 의식 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적극 실천하는 기업에게 캠페인용 의자를 보급
- **건물 청소 노동자에게 휴게 공간을:** 학교, 사무실 등에서 흔히 보는 건물 청소 노동자들은 아직도 마땅한 휴게 공간이 없어 화장실과 창고, 계단 밑에서 식사를 하는 실정. 관공서, 학교, 지하철 역사 등 공공시설에 청소 노동자의 휴게 공간을 설치하고, 일반 사무용 빌딩 등 민간 시설에는 고용주 및 관리자 의식 개선 캠페인 및 휴게 공간 설치비용의 지원을 통해 건물 청소 노동자의 휴게 공간 확보
- **식당 여성 노동자에게 쉼터를:** 음식점 등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나 성희롱 등의 위협을 상시적으로 받고 있으나, 개선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음. 유명 먹자골목 등 식당 밀집지역, 영세봉제공장 밀집지역에 여성 노동자 전용 쉼터를 설치하고, 공공직장 보육시설, 상담(복지, 고용, 폭력, 법률 등) 및 보건소와 연계하여 이동식 건강 상담과 물리치료, 휴식을 제공
- **사회서비스 노동자에게 거점 쉼터:** 거동이 불편한 어른신이나 장애인을 지원하는 재가 요양서비스 노동자나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노동자는 직업 특성 상 대상자의 주거지나 생활공간에 직접 찾아가는 노동을 수행. 별도의 작업 공간이 없다면 식사나 휴식 등을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실정. 이러한 노동자를 위해 공공 사회서비스센터가 있는 곳은 센터 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그 외 지역은 주민센터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해 거점 쉼터 제공.

## 2) 노동시간 단축 / 일자리 나누기 / 삶의 질 제고

- ◆ 공공기관부터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노사협약을 체결해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 인근 상권별 순환 휴일제를 도입해 과도한 휴일영업 및 야간영업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 가족 내 돌봄 담당자에게 '한달 하루 휴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노동시간을 1인당 연간 1,800시간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노동시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200시간마다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유도
- 노동시간 단축을 신규 일자리 창출로 연계토록 지자체 차원의 신규 고용 지원 기금 마련
- 자영업 밀집 지역의 경우, 상권별 순환 휴일제를 도입해 과도한 야간영업 및 휴일영업을 줄이도록 유도
- 가족 내 노인, 장애인, 환자 돌봄을 전담하는 담당자는 생활하는 공간과 돌봄을 수행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지역사회 내 복지관과 연계하여 일시적 시설 보호를 제공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간병인 제도와 연계하여 일시적 재가 돌봄을 제공하여 가족 내 돌봄 담당자도 한 달의 평일 하루는 개인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3) 도시농업 지원 확대: 무상 텃밭, 시민농원 등

- ◆ 시민농원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무상 텃밭 지원을 통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 시민농원을 통해 중고등학생 대상 먹거리 농업 체험 학습프로그램과 독거 어르신 또는 경증 치매 어르신 대상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에 '귀농.귀촌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귀농.귀촌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 4) 1주민 1문화, 문화 마을 만들기

- ◆ 공동 문화 작업장을 만들고 공공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강화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높ی겠습니다.
- ◆ 마을마다 공동도서관을 확충하겠습니다.
- ◆ 지역의 문화공연이나 시설물에 대한 정기관람권.이용권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 예술가 협력 제도를 마련해, 문화예술 공연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 문화 작업장을 만들고, 공공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해 누구나 원하는 문화생활 하나쯤 향유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 기존 공공시설 리모

- 텔링, 신규도서관 확보, 지역 내 학교 도서관 개방 유도, 자료구입 예산 확보, 유급운영인력 배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도서관을 확충.
- 지역 문화공연 또는 시설과 협약을 맺어 3일권, 1년권과 같은 다양한 정기 문화관람권 발행으로 다양한 문화생활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가 아마추어 예술가들에게 연습 공간이나 공연장 등의 장소를 제공하는 대신 예술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 지자체가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생태환경 조성

# 참여와 견제, 지역사회 혁신

## ○ 현황 및 취지

- 지방공기업의 민간부문 사업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낙하산 인사’로 대표자가 되는 일 발생
- 지방공기업 또는 산하기관의 대표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표성이나 권한 등에 제한이 커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세부 추진방안

### 1) 지자체 고위공직자 및 산하 공공기관 대표자 인사청문회 도입

- ◆ 지자체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 지자체 정무직 고위공직자 및 산하 공공기관 대표자를 임명할 때는 지방의회의 청문회 등 사전검증시스템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자의 경력 등 인사기록을 정리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 지방의회는 청문특위를 구성하고 청문에 필요한 의견을 주민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수렴
-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한 청문결과를 단체장에게 보내 수용토록 함
- 지방의회는 해당 청문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 2) 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 확대 및 활동보장

- ◆ 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추천제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위원선출을 함으로써 대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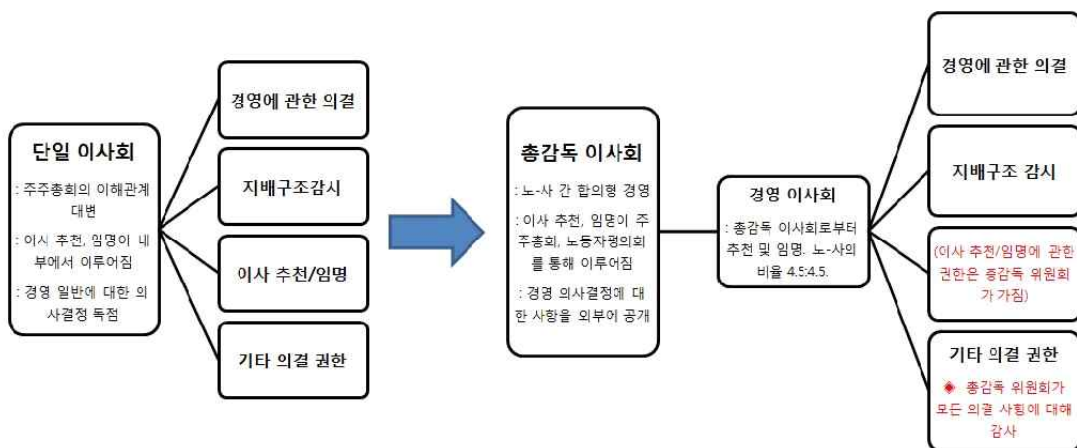
확보 및 특정 이해집단의 편중을 예방

- 각 위원회에 사업결정권 및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는 등 권한부여
- 각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체제 확보
- 지자체는 각 위원회의 활동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의 공개 및 프로그램 개발함
- 위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실비지급 등

### 3) 공기업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이원적 이사회 제도 도입

◆ 지자체 산하 공기업에 이원적 이사회를 도입하여, 공기업 민주화와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 기존의 경영시스템에서는 단일 이사회가 경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의결하고, 이에 대한 감시권 역시 독점.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감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이나 문제제기가 원천 봉쇄되어 있음.
- 공기업 이사회를 최상위 기구인 ‘총감독 이사회’와 ‘실무(경영) 이사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여, 내부 폐쇄형 경영구조를 외부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의사결정의 민주화와 효율적 경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
- 이원적 이사회 제도 도입을 통해, 경영의 전문성을 보장하되 동시에 감시권-의결권을 분리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담보토록 함



<이원적 이사회 예시>